

# 바이든 시기, EU·미 범대서양 동맹의 복원과 향후 전망: EU 다자주의 전략을 중심으로\*\*\*

김현정 동아대학교

## 논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 다자주의 협력 외교에 관해 고찰하고, 최근 강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 하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EU·미 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에 관해 NATO를 통한 동맹의 강화 그리고 EU·미의 對러시아 및 對 중국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 안보체계인 NATO를 통해 러시아 등 기존의 안보위협에 관해 재확인하였으며, 새 시대와 상황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더불어 EU는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보 부문을 포괄한 기술 등의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대서양 동맹의 확증 강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며, 미중의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서 EU의 외교적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힐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미국, 바이든, 유럽연합, 범대서양 동맹, 다자주의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가 2021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과 각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의 당선 취임에 앞선 2020년 12월 2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EU-미 관계 재건에 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EU가 제시한 ‘글로벌 변화에 대한 새로운 EU-미국 어젠다’(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문건은 보건, 환경, 무역, 기술 및 민주주의와 관련한 전방위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동 문건은 반독점 집행 및 정보 보호, 민감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감독, 사이버 테러 대응 협력 등 디지털 규제 환경에 관한 구축, COVID 19 백신 개발 및 보급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개혁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제 분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이다.<sup>1)</sup>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권력 변화, 양자 간 긴장과 일방적 경향에 의해 시험을 받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커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당선인의 승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능한 EU 및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과 결합해 우리가 공동의 가치, 이해관계, 세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를 구상할 한 세대에 한 번 뿐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sup>2)</sup> 이에 앞서 동년 11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발행한 ‘NATO 2030 보고서(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에서는 중국이 유럽의 위협임을 명시하며, 중국의 부상에 대해 EU가 미국과 공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NATO 2030에는 중국이 현 상황에서 러시아와 같이 즉각적 수준의 군사위협은 아니나,

---

1) European Commission. “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joint-communication-eu-us-agenda\\_en.pdf](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joint-communication-eu-us-agenda_en.pdf) (검색일: 2021/02/20).

2) 동아일보. “EU, 바이든에 ‘美·유럽 관계 재건’ 계획 제안…‘다시 연결할 때’.”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02/104260589/1> (검색일: 2021/02/20).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NATO 2020, 27-28). 이러한 EU의 행보는 바이든 시대, EU가 미국과 안보 영역 상당 부분에서 미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미중의 갈등이 단순히 두 국가만의 관계에서 규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기, 유럽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참여와 EU-미국 범 대서양동맹(Transatlantic alliance) 복원 전망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 다자주의 협력 외교에 관해 고찰하고, 최근 강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 하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EU·미 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에 관해 NATO를 통한 동맹의 강화 그리고 EU·미의 對 러시아 및 對 중국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II. EU의 다자주의 외교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더 이상 유럽대륙 국가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종전 후 미·소는 70여 년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였고,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단극체제를 고수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European Community), 나아가 하나의 연합(Union)으로 심화하며 세계의 한 축으로서 다자주의 체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EU의 다자주의 외교 기조에 대하여 기존 연구의 접근 방법은 다음의 세 부류로 구분된다. 이는 ① EU의 소극적 다자주의, ② EU의 적극적 다자주의, ③ EU의 효율적 다자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EU의 다자주의가 이들의 소극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관련 연

구들은 공동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럽이 단계마다 EU차원의 자주적 안보체제를 지향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음을 강조한다. 정병기(2008)는 “유럽연합(EU)의 국제분쟁 대응과 독자적 안보 전략의 부침: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의 안보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에서 EU의 안보체제 선택 경로를 설명하였다. 그는 냉전 종식과 EU의 중·동유럽 확장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EU는 독자적 안보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주적 안보정체성을 모색해왔으나,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는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EU의 대응은 독자적 안보전략 모색의 좌절로 이어졌다고 하였다(정병기 2008, 303). 해당 논문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EU 역할을 다루고 있다. 즉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EU 차원의 참여가 아닌 EU회원국들의 개별국 차원의 참여로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어 EU의 아프가니스탄 대응도 민간 외교정책의 내에서 시민보호 혹은 대민행정에 국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EU의 적극적 다자주의는 소극주의에 비해 다소 광범위한 영역으로 해석된다. EU의 적극적 다자주의는 규범권력의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EU가 강조하는 규범의 영역인 환경, 인권, 기후변화 등의 다자주의 국제협력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성은(2014)은 “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에서 EU의 북한 인권외교정책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EU의 규범권력성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고찰하였다(박성은 2014, 47). 해당 영역 이슈는 ODA도 포괄한다. 이숙종(2012)은 “EU와 중국의 對아프리카 ODA문화: 갈등과 협력 논쟁을 중심으로”에서 EU 회원국들과 중국이 아프리카 원조를 두고 최근 수년간 벌여온 논쟁에 관해 규범의 확산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그는 EU가 인권과 굿 거버넌스와 같은 규범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를 통해 무상원조 중심의 다자적 국제원조체제를 구축해왔다면, 중국은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남협력의 일환으로 양

자관계 틀에서 무역 및 투자와 연계된 원조를 늘리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이숙종 2012, 47). 김두수(2014)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저탄소 경제정책”을 통해, EU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혁신, 에너지안보, 개발과 성장이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김두수 2014, 39). 또한 고주현(2018)은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에서 EU 규범 권력의 특성과 이의 확산 과정을 고찰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EU 규범 정체성의 근거와 대외행위자로서 EU의 한계에 주목하여, EU 설립의 기초가 되는 여러 조약과 법적 근거들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의 가치를 포함한 규범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EU는 공동 방위 능력의 부족과 군사력 부재로 국제문제에 있어 대외적 존재성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고주현 2018, 31). 그는 EU가 규범 권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행위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실려 있음을 분석한 것이다. 규범권력의 영역에서 EU는 국제기구 혹은 국제레짐을 통한 다자간 협력 그리고 EU-상대국 간 양자간 관계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적 다자주의 영역에서의 정책, 전략을 이행해 나아가고 있다.

셋째, EU의 다자주의가 효율적 선택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부류이다. 윤성욱(2020)은 “EU의 효율적 다자주의로 본 이란 핵 협상”은 EU 대외정책의 원칙인 ‘효율적 다자주의(effective multilateralism)’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그는 EU가 이란과 E3+3간의 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란과 미국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윤성욱 2020, 35).

최근 EU와 주요회원국은 미·중 갈등과 아시아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은 미·중 간 군사적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EU의 입장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NATO 동맹 및 연합 차원에서의 전략적 자세가 요구된다(김현정 2021, 67). 이에 본 논문에서는 EU가 균형과 조정 나아가 중재 권력을 통한 전략

적 다자주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EU-미 대서양 동맹의 복원을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 Ⅲ. EU-미국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과 협력

#### 1. 러시아 위협과 EU-미국 협력

러시아는 유럽 및 대서양 안보에 있어 가장 직접적 위협 요인이다. 냉전 종식 후 NATO는 러시아와 더불어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도모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러시아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발트해와 흑해 지역, 지중해 동부, 발트해 북부에서 계속하여 군사력 증강 및 위협적 활동을 이어 나아감으로써 유럽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NATO 2020, 25). 고상두(2020)는 러시아가 초래하고 있는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2014년 크림병합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며 동유럽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 둘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핵무기의 실전 사용가능성을 언급하며 핵전쟁의 공포가 조성되고 있는 점, 셋째, 정보전, 사이버전과 나아가 하이브리드전<sup>3)</sup> 등 새로운 유형의 안보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고상두 2020, 2).

트럼프 정부 시기 러시아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정책은 러시아의 무기통제합의 도출 실패에 따른 강력한 억지·방어 태세의 구축이었다. 2019년 8월 미국은 1987년 체결하였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3) 하이브리드 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당시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다(R. O'Rourke, A Shift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Potential Implications for Defense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p. 4.).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략은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데, 러시아 총참모장 게라시모프(Gerasimov)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전쟁모델은 나토조약 제5조인 자동개입조항이라는 인계철선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전쟁을 실행하는 것이다(고상두 2020, 3.).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sup>4)</sup>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시기 러시아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확대하였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을 지원하였다(Lazarou and Titievskaia 2020, 5). 2021년 1월 27일 신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기, 푸틴이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합의하였다. 동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전략핵탄두의 숫자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다.<sup>5)</sup> 트럼프 시기, 미국은 동 협정 합의에 대한 조건으로 핵무기 통제에 관해 중국을 포함시킬 것 등 여러 요소들을 결합시킬 것을 러시아에 주문하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New START 만료를 앞두고 조건없이 연장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시 Lkashenka 정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관여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러시아-독일 연결의 노드스트림(Nord Stream) 2 파이프 라인에 대한 반대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Lazarou and Titievskaia 2020, 5).

노드스트림 2 사업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공급하는 천연가스 규모를 2배로 늘리는 사업으로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1230km 길이의 해저 천연가스관을 잇는 게 핵심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러시아는 독일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천연가스가 기존의 2배로 늘게 돼 한 해 1100억㎥의 천연가스 운송이 가능해진다.<sup>6)</sup> 노드스트림 2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

4) INF는 500-5500km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 금지 조약이다.

5) 동아일보. “바이든-푸틴, 핵감축협정 ‘뉴스타트’ 5년 연장 합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27/105143336/1> (검색일: 2021/02/20).

6) 아시아경제. “중단 위기 '노드스트림2'에 희비 엇갈리는 열강.” <https://news.v.daum.net/v/20200915113508955> (검색일: 2020/12/15).

과 더불어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내 반대가 거세었다.

<그림 1> 노드스트림(Nord Strem) 2 사업개요



출처: Ouest-France. “Affaire Navalny. Berlin défend toujours Nord Stream 2, malgré les appels à l’abandon de Paris.” <https://www.ouest-france.fr/europe/russie/affaire-navalny-berlin-defend-toujours-nord-stream-2-malgre-les-appels-a-l-abandon-de-paris-7138910> (검색일: 2021/03/15).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동 사업 관련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성국 제재대응법(CAATSA)에 따른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해 왔으나,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해진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미 행정부가 공개한 관련 기업 명단에는 노르웨이 인증기관 노르세베리타스(DNV GL)와 스위스 취리히보험, 독일 뮌헨재보험, 독일 엔지니어링기업 빌핑거, 일본 손해보험업계 1위기업 도쿄해상홀딩스가 운영하는 도쿄마린킬른, 영국 아스펜매니징에이전시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월 24일 미국 베이커휴즈, 프랑스 AXA그룹 등 글로벌 기업 18개사가 노드스트림2 천연가스관 건설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보도가 나왔다.<sup>7)</sup>

7) 조선비즈 “‘러시아 돕지 말라’美 연포에·18개社, 노드스트림2 사업서 손 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878.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5/2021022501878.html) (검색일:

EU는 2007년~2017년 십년간 천연가스 생산량이 39.4% 감소하여 가스 수입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sup>8)</sup> EU의 2018년 에너지 의존율은 56%이며, 이 중 가스는 24%를 차지한다.<sup>9)</sup>

<표 1> 2007-2018 유럽에 대한 주요 가스공급국

국가	2007	2010	2014	2018	증가율
러시아	38.7	31.9	37.4	40.1	+1.4
노르웨이	28.1	27.9	32.1	18.5	-9.6
알제리	15.3	13.9	12	18.5	+3.2
카타르	2.2	9.7	6.8	11.3	+9.1

출처: Eurostat. "Main origin of primary energy imports, EU-28, 2007-2017 (in % of extra EU-28 imports)."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12/15).

탈원전 정책과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해야 할 독일의 입장에서 노드스트림2를 통한 가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EU는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다자주의적 제재 입장 유지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EU는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러시아의 행동에 비추어 제한적인 조치(부문 제한 조치) Restrictive measures in view of Russia's actions destabilising the situation in Ukraine (sectoral restrictive measures)”의 EU 독자제재를 시행중이다.

## 2. 중국 위협과 EU-미국 협력

EU에 있어 중국은 EU가 경제 및 투자 등 부문에서의 협력 파트너(a cooperation partner)이자, 이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협상 대상자(a

2021/ 03/15).

8) Eurostat. "Main origin of primary energy imports, EU-28, 2007-2017 (in % of extra EU-28 imports)."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12/15).

9) Eurostat. "Shedding light on energy on the EU: From where do we import energy and how dependent are we?"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12/15).

negotiating partner), 기술 리더십을 추구하는 경제 경쟁자(an economic competitor)이자 체제라이벌(a systemic rival)이다.<sup>10)</sup> EU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EU는 중국에 대해 “1989년 천안문 시위 관련 구체적 제한 조치(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in relation to the events at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of 1989)”를 취하고 있다.<sup>11)</sup>

NATO는 2020년 발행한 NATO 2030보고서에서 중국이 상당한 수준의 위협임을 적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국에 의한 다면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 등과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이 현 시점에서 유럽과 대서양에 대한 강력한 안보 위협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나, 중국의 대 세계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치적 전략을 개발하고, 안보 도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중국은 그 동안 경제와 투자 부문에서 적극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유럽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U는 2000년 후반 유로존 위기를 겪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에 EU와 각 국 정부는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요 회원국이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sup>12)</sup> 및 BRI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7년 간의 장기협상 끝에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 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유럽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태도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원

10)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EU-China - A strategic outlook12.”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communication-eu-china-a-strategic-outlook.pdf> (검색일: 2021/01/23).

11) EU Sanctions Map. <https://www.sanctionsmap.eu/#/main> (검색일: 2021/01/22).

12) EU 회원국 중 AIIB 참여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총 19개 국가다.

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유럽 내 회의론이 팽배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시장개방을 시작한 이래 유럽의 대(對)중 유화책은 중국이 통상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교류의 지속을 통해 유럽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은 중국의 시장 개혁이나 민주주의로의 이행, 인권 보호 등이 유럽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이를 용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다(전혜원 2020a, 4). 그러나 G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고도 기술 집적 산업 등 선진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른 유럽의 위기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치-안보-경제를 연계한 전략과 보복을 자행하는 국가로 규범 영역을 선도해 온 EU의 입장에서 가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둘째, 미중 갈등이 전면화 되며, 유럽뿐 아니라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외교·통상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왔다. 유럽은 그 간 특히 안보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 개입보다 소극적 관여 혹은 제재를 통한 전략적 자세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맹국에까지 무역불공정 개선을 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다각적이며 공격적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NATO 및 한미동맹 체제에서도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알리며, EU가 선도해 온 신기후 체제를 지지하였다.

EU는 이와 같이 중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회원국 각 국의 서로 다른 입장과 경제협력에 대한 타협과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된 독일 총선 불참이 예상됨에 따라, 독일의 대(對)중 정책도 보다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전혜원 2020a, 16-17).

## IV. EU-미 범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

###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럽의 참여

미국은 2017년 이후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을 지전략(geostrategy)의 구심점으로 삼아 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동 전략을 제기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서슴없이 공개하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이 이끌어 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에도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다. 해당 전략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호주, 일본, 인도를 전략적 지역으로 지정하여 안보를 수호하려는 신 안보정책이다. 해당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력체 쿼드(Quad: Quadrilateral cooperation)는 2007년 공식화되었지만 9년간 중단되었다가 2017년 트럼프 정부 시기 부활되었다. 2021년 3월 12일 쿼드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미 안보의 주요 기제로서 거듭나고 있다. 정상회담 개최 다음날 쿼드 정상들은 ‘우리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Our four nations are committed to a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해당 제안문에는 “쿼드 정상회의는 공동의 비전 증진 및 평화, 번영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함에 동의한 파트너들 간 유연한 그룹”이라 설명하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며 추구할 것”이라 하였다.<sup>13)</sup> 즉 쿼드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열려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동 회담은 쿼드 4개 참가국의 첫 정상회담이라는

---

13) Washington Post. “Opinion: Our four nations are committed to a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3/13/biden-modi-morrison-suga-quad-nations-indo-pacific/> (검색일: 2021/03/20).

의의 이외에도, 한때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적실한 구심 역할을 하지 못했던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응해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이전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기 첫 정상회의를 추진함으로써 쿼드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 중심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sup>14)</sup> 쿼드의 확대에 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나,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쿼드 4개국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차관급 화상회의를 진행한 이후, 쿼드+3 혹은 쿼드 플러스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였다. 쿼드는 미국의 의지 하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인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인도-태평양 참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관해 가장 강력한 관여를 시행한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최근 국제정세를 불확실과 일방주의의 증가하는 상태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로 법치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안정적, 다극적 질서 유지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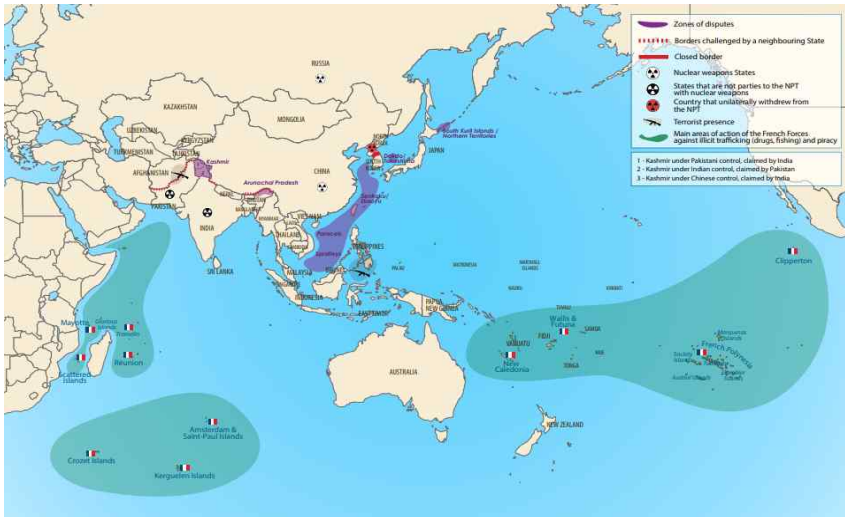
14) Washington Post. "Meeting of leaders signals the 'Quad' grouping will become central part of the U.S. strategy in A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quad-diplomacy-counter-china/2021/03/12/9317aee8-8299-11eb-ac37-4383f7709abe\\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quad-diplomacy-counter-china/2021/03/12/9317aee8-8299-11eb-ac37-4383f7709abe_story.html) (검색일: 2021/03/20).

15)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The Indo-Pacific region: a priority for France."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ty-for-france/> (검색일: 2020/12/15).

<그림 2> 인도-태평양 지역 이슈 및 프랑스



(a) 인도-태평양 역내 프랑스



(b)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이슈

출처: Ministère des Armées.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ty-for-france/> (검색일: 2020/12/15).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대해 현실적 지리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외령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의 93%를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150만 명의 프랑스 국민과 8,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다.<sup>16)</sup> 프랑스는 해당지역에서 지역 위기 해결, 주요 해운 경로의 안전 도모, 테러리즘 및 조직 범죄 퇴치에 강력히 참여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프랑스는 안정적 다극 지역 균형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중재 권력(mediating power)으로서 자리잡기를 원하고 있다.

<표 3> 프랑스와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교

국가	프랑스	독일
문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태평양에서의 프랑스와 안보</li> <li>프랑스의 인도-태평양 방위 전략</li> <li>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li> </ul>
주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의 주권, 영토, 영해, 영공, 국민 보호</li> <li>UN 해양법의 엄정한 적용</li> <li>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방위에 대한 함의 포함)</li> <li>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협력 (특히 FRANZ 협정)</li> <li>지역 내 프랑스의 군사적 입지 강화</li> <li>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를 위한 다자협력체제 공고화</li> <li>방위 장비 수출 확대 및 방위 산업 협력</li> <li>이슬람 테러 위협 대응</li> <li>보건, 인권, 법치, 문화적 다양성</li> <li>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호혜주의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균형을 추구</li> <li>미국, 인도, 호주, 일본과 안보 부문 양자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협력 강화</li> <li>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li> <li>안보협력 기반 구축</li> <li>인권 보호와 법치 증진</li> <li>규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자유 무역 추구</li> <li>규칙에 기초한 연결성과 디지털 전환 추구</li> <li>문화·교육·과학을 통한 인적 교류 증대</li> <li>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인지하고 경제 관계의 다변화 추구</li> </ul>

16)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The Indo-Pacific region: a priority for France."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ty-for-france/> (검색일: 2020/12/15).

<p>주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입지 강화 및 EU 인도-태평양 전략 도출. 영국과도 공조</li> <li>• 아세안-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li> <li>• 인도,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과 전략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불법 밀매(마약, 어업 등)에 대처하는 작전 수행</li> <li>• 해양과 해로에 관한 감시 센터 지원</li> <li>• 공동 군사 훈련의 심화 및 확대(육해공군, 양자 및 다자)</li> <li>• 태평양 쿼드(프, 미, 호, 뉴)의 일원으로 환경 안보 예방 조치 협력 확대</li> <li>•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우주안보, 극지 안보에서 다자 대화 증진</li> <li>• 지역의 모든 다자체제에 대한 참여 증대 (특히 ADMM+, HACGAM, IORA, ReCAAP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추진</li> <li>• 인도, 일본과 협력하여 UN 안보리 개혁 추진</li> <li>• 아세안-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li> <li>• ADMM+ observer 지위 획득, ReCAAP가입</li> <li>• Regional German Information Centre in Singapore 수립으로 허위정보 대응</li> <li>• 아시아 지역 무기 수출 규제 협력</li> <li>• 일본, 호주 등과의 디지털 산업협력 촉진</li> <li>• 인도와 환경 협력</li> <li>• EU와 인태 국가 간 무역·투자 협정 협상에 박차</li> </ul>
<p>지역 질서 개념</p>	<p>법치에 기반한 다극 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다극 지역 균형</li> </ul> <p>프랑스의 역할은 “중재 권력(mediating power)”</p>	<p>다자간(multilater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칙과 다자주의에 기초한 다극체제</li> <li>• 아세안 중시</li> </ul>

출처: (전혜원 2020b, 11).

이에 비해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책 가이드라인(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 region)’의 제시를 통해 아시아 관여를 시행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독일은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이 적극적 기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함을 강조함, ②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도모함, ③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보호 등 지역의 공동안보 이슈에 대해 협력함, ④ 국제법 및 국제 규범에 의한 질서 구축 그리고 인권 보호를 증진함, ⑤ 문화·교육·과학 분야

교류 나아가 협력 증대 등의 원칙을 공개하였다.<sup>17)</sup> 그러나 독일 외교부는 위와 같은 원칙이 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며, EU-중국 간 경제적 커플링에 의한 상호보완적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한 독일의 ‘독자 노선’이라고 공표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 회원국들은 자국이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태평양 개별 섬 국가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역사적, 포괄적 관계국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1년 4월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을 위한 EU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을 공표하였다. 동 전략은 EU가 해당 지역에서 안정, 안보, 번영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법치, 인권 및 국제법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9)</sup> EU는 안보 분야에 관하여는 NATO에 의존하며, 연합 차원에서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관여라는 전략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2. EU-미국의 범대서양 동맹 복원 진행과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2021년 6월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한다고 발표하였다.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의 참여와 겹쳐지는 이번 순방은 동맹 복원의 목적이 뚜렷하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은 동맹을 복원하고 범대서양 관계를 되살리는 그의 노력을 조명

17) Federal Foreign Office. "'Germany - Europe - Asia: shaping the 21st century together": The German Government adopts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https://www.auswaertiges-amt.de/en/aussenpolitik/regionaleschwerpunkte/asien/german-government-policy-guidelines-indo-pacific/2380510> (검색일: 2020/12/15).

1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원칙 선언.”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63&num=664](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63&num=664) (검색일: 2020/12/15).

19) European Union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96740/EU%20Strategy%20for%20Cooperation%20in%20the%20Indo-Pacific](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96740/EU%20Strategy%20for%20Cooperation%20in%20the%20Indo-Pacific) (검색일: 2021/05/10).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국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과 다자 파트너 간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20)</sup>

이와 같이 양측 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행위 고위대표(the High Representative)는 2020년 12월 ‘EU-미국: 글로벌 변화를 위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EU-US: A new transatlantic agenda for global change)’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동 의제를 공표하며, 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리는 오늘날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범대서양 의제를 설계하기 위해 기반을 갖추고 있다. 범대서양 동맹은 공유된 가치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더 강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에도 관심이 가지며, 범대서양 파트너십이 강하면 EU-미국이 양측 모두가 강해짐을 확신한다.”고 하였다.<sup>21)</sup>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시기 많은 부침을 겪은 양측 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같이 범대서양 관계에 헌신적 인물을 중용하며, 양측 간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2월 개최된 뮌헨 안보 컨퍼런스(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초기 동맹의 방향성에 관한 명백한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그는 미국이 범대서양 동맹으로 돌아왔음을 명확히 하며, 이 동맹이 집단안보와 공동번영의 기반이며, 21세기 양측 관계의 토대임을 강조하였다.<sup>22)</sup> 바이든 당선 후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EU-미국 동맹 백서’를 통해 범

20) 조선일보 “바이든 첫 해외순방지는 서유럽.. 6월 영국 찍고 벨기에 간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4/24/UFEL7JMVHVCY5CWG74FZ5XR2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4/24/UFEL7JMVHVCY5CWG74FZ5XR2I/?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검색일: 2021/05/10).

21) European Commission. "EU-US: A new transatlantic agenda for global chang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79](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79) (검색일 2021/05/10).

22)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the 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2/19/remarks-by-president-biden-at-the-2021-virtual-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1/05/10).

대서양 무역 및 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NATO는 동맹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현재의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NATO는 'NATO 2030' 보고서를 통해 대 중국 전략을 조정하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연합국 내의 민주적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복원력 센터(a Center of Excellence for Democratic Resilience to protect democratic institutions within allied countries)의 건설을 권장하였다.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는 범대서양 동맹 부활을 위한 3단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단계는 COVID-19 퇴치를 위한 협력, 2단계는 범대서양 안보 활성화, 3단계는 양측 간 기술협력력이다.<sup>23)</sup> EU는 초국가적 체제라는 특성에 따라, 이전 시기 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NATO에 의해 처리하려 하였으나, 최근 더 많은 군사적 능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4)</sup> 이에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EU는 NATO를 통한 협력 이외에도 안보 부문을 포함한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 V. 결론

트럼프 정부 시기 EU-미국 간 동맹은 일정 정도 긴장과 갈등을 경험했다. 미중 갈등을 겪고 있던 트럼프 정부는 통상영역에서 일방주의적 행보를 보이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American First)을 시행해 왔다. 그의 행보는 통상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럽, 한국, 일본 등의 동맹국에 대해서도 안보 비용에 관해 치열한 의견 조율을 종용해 왔다.

23) Atlantic Council. "A three-step plan for reviving the transatlantic alliance."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three-step-plan-for-reviving-the-transatlantic-alliance/> (검색일: 2021/05/10).

24) Biscop Sven. "The Future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Not Without the European Union." <https://core.ac.uk/download/pdf/334787395.pdf> (검색일: 2021/05/10).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피즘(trumpism)은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되며, 바이든 정부 시기까지 미국 국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이든 신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 중국 강경정책 모드는 이어가고 있으나, 동맹과 관련한 대외정책에서 확고한 동맹관계 복원 전략을 취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상호 확증적 위협국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범대서양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 안보체계인 NATO를 통해 러시아 등 기존의 안보위협에 관해 재확인하였으며, 새 시대와 상황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더불어 EU는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보 부문을 포괄한 기술 등의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대서양 동맹의 확증 강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며, 미중의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서 EU의 외교적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힐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주현. 2018.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EU연구』 50호, 31-71
- 김두수. 2014.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저탄소 경제정책.” 『국제경제법연구』 제12권 2호, 39-66.
- 박성은. 2014. “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권 2호, 47-80.
- 김현정. 2021. “유럽안보에 대한 중국 위협 요인과 유럽의 대응.” 『국제정치연구』 제24권 1호, 59-80.
- 윤성욱. 2020. “EU의 효율적 다자주의로 본 이란 핵 협상.” 『평화학연구』 제21권 4호, 35-58.
- 이숙종. 2020. “EU와 중국의 對아프리카 ODA문화: 갈등과 협력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1권 1호, 57-90.
- 전혜원a. 2020. “유럽이 본 중국: 전략적 동반자에서 체제적 라이벌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8호, 1-25.
- 전혜원b. 2020.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44호, 1-27.
- 정병기. 2008. “유럽연합(EU)의 국제분쟁 대응과 독자적 안보 전략의 부침: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응의 안보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7권 2호, 303-322.

### 2. 외국문헌

- Lazarou. 2020. Elena and Jana Titievskaia, US foreign policy after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Issues for the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EPRS).
- NATO. 2020. NATO 2030: United for a New Era (NATO).

### 3. 기타

- 동아일보. “EU, 바이든에 ‘美·유럽 관계 재건’ 계획 제안…“다시 연결할 때.”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02/104260589/1> (검색일: 2021. 2. 20).
- 동아일보. “바이든-푸틴, 핵감축협정 ‘뉴스타트’ 5년 연장 합의.”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27/105143336/1> (검색일: 2021. 2. 20).
- 아시아경제. “중단 위기 '노드스트림2'에 희비 엇갈리는 열강.”  
<https://news.v.daum.net/v/20200915113508955> (검색일: 2020/12/15).
- 조선비즈. ““러시아 돕지 말라” 美 언론에…18개社, 노드스트림2 사업서 손 뗐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n25/2021022501878.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n25/2021022501878.html) (검색일: 2021/03/15).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원칙 선언.”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63&num=664](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63&num=664) (검색일: 2020/12/15).
- 한국무역협회. “EU, 중국 견제 위해 미국과 기술 동맹 추진.”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ercNews/cm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04828> (검색일: 2021/01/23).
- 한국무역협회. “‘중국 화웨이 퇴출’한 영국, 법으로 고위험 장비업체 배제.”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ercNews/cm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04645> (검색일: 2021/01/23).
- Atlantic Council. “A three-step plan for reviving the transatlantic alliance.”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three-step-plan-for-reviving-the-transatlantic-alliance/> (검색일: 2021/05/10).
- Biscop Sven. "The Future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Not Without the European Union." <https://core.ac.uk/download/pdf/334787395.pdf> (검색일: 2021/05/10).
- ENISA. "New Guidelines for Telecom and 5G Security." <https://www.enisa.europa.eu/news/enisa-news/new-guidelines-for-telecom-and-5g-security> (검색일: 2021/01/23).
- European Commission. “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joint-communication-eu-us-agenda\\_en.pdf](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joint-communication-eu-us-agenda_en.pdf) (검색일: 2021/02/20).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HR/VP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uncil EU-China - A strategic outlook12.”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communication-eu-china-a-strategic-outlook.pdf> (검색일: 2021/01/23).
- European Commission. "EU-US: A new transatlantic agenda for global chang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79](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279) (검색일: 2021/05/10).

- Eurostat. "Main origin of primary energy imports, EU-28, 2007-2017 (in % of extra EU-28 imports)."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12/15).
- Eurostat. "Shedding light on energy on the EU: From where do we import energy and how dependent are we?" <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일: 2020/12/15).
- EU Sanctions Map. <https://www.sanctionsmap.eu/#/main> (검색일: 2021/01/22).
- European Union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96740/EU%20Strategy%20for%20Cooperation%20in%20the%20Indo-Pacific](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_en/96740/EU%20Strategy%20for%20Cooperation%20in%20the%20Indo-Pacific) (검색일: 2021/05/10).
- Federal Foreign Office. "'Germany - Europe - Asia: shaping the 21st century together": The German Government adopts policy guidelines on the Indo-Pacific region." <https://www.auswaertiges-amt.de/en/aussenpolitik/regionaleschwerpunkte/asien/german-government-policy-guidelines-indo-pacific/2380510> (검색일: 2020/12/15).
-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The Indo-Pacific region: a priority for France,"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ty-for-france/>(검색일: 2020/12/15).
- Ministère des Armées. "Fran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asia-and-oceania/the-indo-pacific-region-a-priority-for-france/> (검색일: 2020/12/15).
- Ouest-France. "Affaire Navalny. Berlin défend toujours Nord Stream 2, malgré les appels à l'abandon de Paris." <https://www.ouest-france.fr/europe/russie/affaire-navalny-berlin-defend-toujours-nord-stream-2-malgre-les-appels-a-l-abandon-de-paris-7138910> (검색일: 2021/03/15).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at the 2021 Virtual Munich Security Conferenc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1/02/19/remarks-by-president-biden-at-the-2021-virtual-munich-security-conference/> (검색일: 2021/05/10).
- Washington Post. "Opinion: Our four nations are committed to a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1/03/13/bid>

en-modi-morrison-suga-quad-nations-indo-pacific/ (검색  
일: 2021/03/20).

Washington Post. "Meeting of leaders signals the 'Quad'  
grouping will become central part of the U.S. strategy in  
Asia."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quad-diplomacy-counter-china/2021/03/12/9317aee8-8299-11eb-ac37-4383f7709abe\\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quad-diplomacy-counter-china/2021/03/12/9317aee8-8299-11eb-ac37-4383f7709abe_story.html) (검색일: 2021/03/20).

투고일 : 2021년 5월 15일 . 심사일 : 2021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1일

\* 김현정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유럽안보에 대한 중국 위협 요인과 유럽의 대응", "유로존 위기를 통해 본 이중 속도 유럽에 관한 논의: 비셰그라드 그룹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관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및 유럽지역 연구다.

<Abstract>

**Restoration of the EU-US Trans-Atlantic Alliance  
and Future Prospects in the Biden Period :**  
Focusing on the EU Multilateral Strategy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existing EU multilateral cooperation diplomacy and analyzes the strategies of the EU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recently emphasized Indo-Pacific strategy. The EU and the US are trying to form a multilateral structure by cooperatively responding to the real threats of both sides, Russia and China. Based on this,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ospect of restoring the EU-US Atlantic Alliance from a complex perspective through strengthening the alliance through NATO and the EU-US countermeasures against Russia and China. Through NATO, the traditional security system in Europe, it reaffirmed existing security threats such as Russia, and adjusted the priority of threats according to the new era and situation. In addition, the EU is pursuing an interaction between EU-US cooperation in cross-issue areas such as technology covering the security sector through the Trans-Atlantic Alliance. It is believed that strengthening the confirmation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will narrow China's options and broaden the EU's diplomatic activities and role in stro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Keywords :** United States, Biden, European Union, Trans-Atlantic Alliance, Multilateralism